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사법리스크 가속화

법원 유죄 선고시 형량에 촉각 '민주당 이재명 2기' 최대 위기 일극체제 균열...대권기도 비상 김민석 "위증도, 교사도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데 이어 25일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인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이뤄지면서 사법리스크가 가속화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전 선거법보다 더 큰 고비로 여겨지고 있어,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도 최대 위기를 맞는 형국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5일 오후 2시 검사 사칭 사

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에게 유죄 또는 무

죄가 선고될지, 유죄 선고시 형량이 어떻게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위증 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최근 법원은 위증교사사에 대해 엄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5일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열흘 만에 다시 정치적 고비에 직면하는 셈이다.

특히 이날은 공교롭게도 '이재명 2기' 지도부 체제가 출범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무죄를 기대했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중형을 받으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초

긴장 상태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법정구속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두번째 재판 후에도 남아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

지난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또 기소되면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은 5개로 늘었다.

이재명 2기 체제에서 집권플랜본부를 꾸린 민주당으로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담이 가중되며 풍전등화에 놓였다.

또 다시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 일극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시간이 갈수록 여

론도 악화될 것이란 우려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 1심 선고와 그 이후 검찰의 추가 기소를 통해서 이 대표와 관련된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죽이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개별 사건과 횡수에서의 결과는 각각 굳이 평가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이 대표에 중형이 선고될 경우에 대비한 당 방침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보고 있는 점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그대로 동일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김건희 특검 수용 않는 개각은 물타기용"

여당에 특검 수용 거듭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김건희·국정농단 특검 수용 않는 개각은 물타기용"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과 공천 개입, 비선 실제 명태군 씨가 국정과 공당에 뺏은 마수가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지경"이라며 여당에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경북 지역의 한 재력가가 명태군 씨에게 아들을 채용시켜 달라며 돈을 건넨 정황이 확인됐고, 그 아들은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증언과 대선 당시 물밑에서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에 개입한 정황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명 씨가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게 신문지로 쓴 돈다발까지 받

아가며 공천 뒷거래를 했다는 보도까지 터져 나왔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명태군의 힘으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일개 정치브로커를 비선 실제로 만든 권력자가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VIP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이 명씨와 한 몸처럼 움직이지 않았다면 명 씨가 이 정도로 폭주할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황 대변인은 "국정에 여사와 명 씨의 입김이 닿아있는데, 개각한다고 국정농단이 사라지나. 본질은 바꾸지 않고 포장지만 같아 치운다고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라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 국정농단 때보다 국민의 분노는 더 빠르고 넓게 퍼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특검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구호 외치는 여당과 집회 참가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 의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스

광주시 재정여건 악화로 공사 중단...간접비 소송 잇따라

시의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올해까지 2년간 소송 5건 달해

광주시의 재정여건 악화로 발주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보상금 성격의 간접비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이 발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광주시를 피고로 한 공사업체의 간접비 소송은 5건이다.

광주 용두~전남 담양 대전간 도로 확장 공사가 10개월 가량 지연되면서 시공사가 제기한 간접비 소송 결과 광주시가 업체에 2억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원 조정이 합의됐다.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면 발주처가 지체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발주처의 책임으로 공사가 연장되면 시공사는 인건비, 장비 대여료, 사무실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추가비용(간접

비)을 청구할 수 있다.

광주 서창천 고항의 강 조성공사도 공법 선정과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공기가 연장돼 1억5100만원의 간접비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공사 지연으로 봉선배수지 건설공사는 7억1100만원, 노사동방성장지원센터 건립사업은 1억6900만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무등경기장) 건립공사는 9400만원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광주시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는 토목 37건과 건축설비 26건 등 63건으로 이 중 공사가 일시 정지된 적이 있어 간접비 소송이 우려되는 공사는 3건이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은 곧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함께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부서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현 기자

군함도 이어 사도광산 약속도 어긴 일본

일, 추도식 개최... "한국 불참 유감" 민주 "외교무능 넘어 친일 정부 의심"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가운데, 지난 2015년 군함도(일본명 하시마) 사태에 이어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한국이 이용만 당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사도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한국 측 인사 없이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불참하기로 한 사도광산 추도식을 예정대로 열고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주한국일본대사관을 통해 배포한 입장에서 "정부로서 주최자인 현지 관계자와 협력하면서 일한 정부 간에서도 정중한 의사소통을 실시해왔다"며 "이번에 한국 측이 불참한다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과거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전력으로 논란이 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판단으로 외무성에서 홍보문과 및 아시아 대양주 정세를 담당하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참의원(상원) 선거 당선 직후인 2022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앞서 우리 외교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반 사정'은 일본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기로 한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의 2022년 8월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 사실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행에 이례적인 균열을 내지 않기 위해 7월 일본 정부와 합의를 이뤘다.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고, 이를 위한 전사와 연례행사 성격의 추도식을 공언했다.

하지만 추도식마저 마지못해 하는 식으로 다뤘다.

약속과 달리 사도광산 전시물에서 '강제' 표현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던 이쿠이나 정무관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지난 2015년 군함도 등재 때와 같은 상황이다.

당시 일본은 강제노역 실상을 반영한

강제동원 정보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2020년 3월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도쿄에 개관했다.

전시물은 오히려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위치도 군함도가 있는 나가사키에서 1000km 넘게 떨어진 도쿄여서, 군함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뻔뻔한 태도를 향한 비난과 동시에, 추도식을 사도광산 합의 성과 중 하나라고 자평해온 우리 정부에 대한 외교적 책임론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막기는커녕, 국민의 자긍심과 자존심마저 몽개버린 책임을 반드시 물겠다"고 정부를 직격했다.

강원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도광산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우리 선조들을 추도하는 자리에 일제 전범을 기렸던 일본 측 인사가 참석하기로 했다"며 "이는 추도가 아니라 모욕"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 조차도 윤석열 정부는 한참 늦게 확인해 추도식 하루 전날 부랴부랴 우리 측 불참을 통보했다"며 "이쯤 되면 단순한 외교적 무능을 넘어 친일 매국 정부의 치밀한 계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